

# 3 민중운동의 현황과 전망

이 회수

## 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공세에 놓인 민주화운동

97년 IMF 지배 체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화 특수' 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는 역행하고 민중의 실질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배제되고 있다. IMF 지배 체제 구축과 김대중 정부 등장을 계기로 지난 5년간 더욱 심화된 대외종속의 강화,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의 후퇴, 그리고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공공 부문의 축소와 환경파괴의 심화, 군비확충과 신냉전의 강화 등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이 초래한 사회 경제적 재앙이 얼마나 심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김대중 정권 말기 추진된 경제자유구역 법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그리고 주 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 조합법 등은 민중들의 민주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자 한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민중운동진영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보수반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구체제를 청산하려는 민주적 노력으로 평가받던 <국가인권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활동 등도 정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형해화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 5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통해 흐르는 민중의 눈물을 닦아 준 시기가 아니라, 시

장경제 확산에 따른 생존권의 위협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한 민중 재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역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곤과 전쟁의 세계화를 가져오고,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을 더욱 첨예한 형태로 촉진하면서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현대 제국주의의 위기 탈출 정책이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초국적 자본의 야만과 광란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중들의 반세계화 반전운동으로 촉발된 반제국주의 운동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이 같은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지배진영과 민중운동진영이 시장이나 민주주의나 등 문제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중운동진영은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한 주체의 자기 혁신과 더불어 광범위한 민주진보세력의 연대, 연합을 강화하여 새로운 단계의 민주화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운동의 주객관적 정세는 민중운동진영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혁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의 전면화는 민주주의 후퇴를 동반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제휴를 통해 민주화의 실현을 기대한다는 것은 허상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화두는 세계화와 전쟁으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민주주의의 파괴 등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보수반동화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전선 구축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운동진영은, 특히 민중운동진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재앙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과 그 폐해를 막고자 하는 새로운 운동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국적 금융자본이 받드는 시장과 효율의 우상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공세 아래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자주는 급속히 악화·축소되고, 역으로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차별과 종속의 흐름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과 체제적 위기가 전면화된 반민주적인 신자유주의 시대에 민중운동의 주요한 시대적 과제 역시 평등과 자주를 핵심 개념으로 삼아 민주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쟁점화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에서는 지난 87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을 민중운동의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그 과정에서 민중운동의 역할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민중운동이 주도하는 민주화운동은 어떠한

과제와 목표를 갖고 변화하는 정세를 헤치고 나가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민중운동진영은 97년까지 국가와 자본에 포섭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과 부침을 거듭해 왔지만, IMF 지배 체제가 본격화된 98년을 계기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반세계화운동의 중심에 서서 새롭게 투쟁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민주화운동의 전망과 연관하여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더욱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정세를 볼 때, 2002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향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추진 주체의 형성과 민주화운동의 주도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회운동진영 내의 실천적 고민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민중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양상

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변혁운동을 지향하는 민중운동의 흐름은 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IMF 지배 체제의 도입과 김대중 정권이 등장한 97~98년까지를 민중운동의 제1시기라 한다면,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개혁이 전면화된 98년 이후를 민중운동의 제2시기라 할 수 있다. 제1시기에는 구체제의 청산과 각 부문의 민주화 실현이라는 민주 대 반민주간의 대립전선을 여전히 지배적인 전선으로 하여 민중운동의 성장이 도모됐다. 반면에 제2시기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제국주의 지배 착취에 반대하는 진보진영과 신자유주의 개혁을 내건 보수세력과의 대립구도를 주요 전선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구체제를 온존 강화하고자 한 수구세력과의 투쟁을 부차적 전선으로 하여 민중운동의 정치적 성장이 추진됐다.

### 1) 87년 6월 항쟁에서 97년 IMF 지배 체제까지

이 시기는 권위주의 정권이 후퇴하고 제한적이거나 열려진 공간 속에서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가 촉진됨에 따라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대중운동이 전국적 차원의 조직운동으로 발전하던 때이다. 반면에 민중운동의 정치적 성장이 지체되면서 지배세력의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분할통치가 가속화됐으며, 그 속에서 민중운동은 3당 합당으로 표현되는 보수대연합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시련의 시기였다. 그 결과 양적으로는 민중운동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지만, 정치적으로는 변혁운동의 자기 해체를 겪어왔던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 차원의 대중조직 출현과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부문운동의 성장을 통해 민중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의 근거지를 확보했다. 87년 이후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최대의 조직적 성과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계급적 대중조직의 전국적 발전과 여성, 환경, 인권, 문화, 통일, 보건, 교육 등 각 부문운동의 전국적 발전이다.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 90년 1월 전노협 결성과 4월의 전국농민회총연맹 결성, 1993년 한총련 결성과 1995년 민주노총 창립, 그리고 1987년 이후 결성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의협, 건치, 건약,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부문운동의 성장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민중운동의 성장은 이후 지배진영이 국제화·세계화라는 미명으로 민중들의 민중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짓밟고 이를 거꾸로 돌리려는 보수반동적인 흐름에 저항하는 중요한 사회운동의 동력으로 역할하면서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을 추동하고 있다.

둘째, 민주화운동세력이 정치적으로 분화되는 속에서 기층 민중운동진영은 지배진영에 대항하는 저항 블록을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공세가 노골화된 97년 말 IMF 체제에 대한 정치적 대응력을 상실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민중운동진영은 노태우 정권이 조성한 공안정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89년 민주연합전선인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을 결성했다. 그러나 기층 민중운동이 아직 조직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지 못한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전선운동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상층 간부들의 전선운동 이탈 등으로 인하여 90년 초기 민중운동은 정치적 고립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후 민중운동진영은 한시적 공동투쟁체인 국민연합의 결성(1991년)과 상설적 공동투쟁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1992년)의 건설을 통하여 정치적 민중운동전선을 구축하고자 했지만, 김영삼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전선운동은 결정적으로 와해됐다. 김영삼 정권의 등장은 민중운동에 대한 관리 방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기존의 재야야당-지배정당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탄생함으로써, 87년 이후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라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상당 부분 허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큰 틀에서 민주화운동진영의 분화 속에서 이뤄졌다. 먼저 민주개혁을 목표로 보수대연합 구도로 대거 투항하는 세력이 형성됐고, 문민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합법 공간에 대한 강조와 함께 공개적 활동을 지향하는 독자 정치세력화 추진세력과 민중운동의 계급적 전선운동적 발전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또한 김영삼 정권은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한국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 같은 체제 내적

이고 보수적인 시민단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전투적인 민중운동진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탄압과 고립화를 추구하는 포섭과 배제라는 이중 전략을 취함으로써 민중운동의 정치적 발전을 봉쇄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배진영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 같은 이중 전략은 김영삼 정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초국적 자본의 공세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위기의 심화와 이에 대한 지배진영의 정치적 대응으로 나타난 민주주의 후퇴 및 정치적 반동화는 시민사회의 재급진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김영삼 정권 말기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저항하여 일어난 96~97년 노동자 총파업투쟁을 계기로 민중운동진영과 진보적 시민단체간의 사안별 연대가 구축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수반됐다. 그러나 이미 민중운동은 전반적으로 IMF 지배 체제와 김대중 정권 초기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해 전면적인 대항을 하기에는 정치적·조직적으로 너무나 취약한 조건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90년대 민중운동이 잃어버린 정치적 내용이다.

## 2) IMF 지배 체제와 김대중 정권 등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시기는 제국주의·IMF 체제의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공세가 전면화되면서 그동안 고립분산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왔던 기층 대중조직들이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반세계화·반정부 투쟁전선으로 재결집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때이다. 또한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항한 진보진영과 보수적 지배집단 간의 대결구도가 전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민중운동의 조직적 흐름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98년 5월에 민중운동진영은 <고용실업 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수구보수세력을 청산하고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민중연대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IMF 범국민운동본부는 신자유주의 개혁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하는 민주개혁세력과 신자유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민중운동세력 간의 연합전선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첩되고 모순된 연대전선은 제국주의의 IMF 지배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기층 민중운동의 대중투쟁이 본격적으로 고양되기 시작한 98년 11월 민중대회를 계기로 민주개혁연합세력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진보적 민중운동진영으로 분화하게 됐다. 이후 민중운동진영은 99년 민중대회 등을 거치면서

2000년 3월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2001년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등을 건설하고 전선운동 전망을 열어가는 전국민중연대 본조직 건설을 당면 목표로 하여 변혁운동 전망을 갖는 민중연대전선을 강화해가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흐름을 살펴보면, 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담론을 뛰어넘어 현대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와 이를 추종하는 김대중 정권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개혁을 반대하는 반신자유주의·반정부 전선으로 결집했다. 전농이 농업개혁위원회를 탈퇴한 뒤 농가 부채와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여 반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민중운동은 반정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김대중 정권을 친미 사대적인 종속정권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됐다. 반면 이 같은 급진적인 민중운동의 흐름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대중 정권의 개혁 담론을 중심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참여 전술을 구사했다. 그 과정에서 시민운동은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는 금융, 재벌, 기업, 노동 등 4대 부문에 걸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해 상당 부문 눈을 감거나 용인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우는 민중운동진영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상황을 목인하기도 했다.

어쨌든 민중운동진영은 IMF 체제와 김대중 정권의 개혁에 대한 태도 논쟁과 민중연대투쟁을 통한 실천적 노력을 가시화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신자유주의 개혁을 뛰어넘는 새로운 단계의 반세계화·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재 전국민중연대로 조직적 발전을 이룩한 민중운동진영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과 군사주의 노선에 의한 전쟁의 세계화(신냉전)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주의 쟁취,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반전평화 및 민족자주 쟁취 등 4대 과제를 내걸고 투쟁전선을 구축하면서 민주변혁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가고 있다.

### 3. 민중운동의 역할과 위상, 현 단계 주요 쟁점

#### 1)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의 역할과 성과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은 항상 당대의 주요한 문제 해결을 시대적 과제로 제기

해 왔다.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이 독재타도와 민주쟁취였다면, 90년대는 수구세력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심화 확대였으며, 2000년대는 반세계화·반전운동을 통한 사회적 평등과 자주 평화의 쟁취이다. 민주화운동은 굳어 있는 화석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하고 움직이는 생명체이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의 강력한 동력은 민중운동에서 제공되고 있다. 민중운동은 사실상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으며, 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를 촉진하면서 50년 반공개발독재 체제에 파열구를 냈고,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자유주의적 개혁이나 시민적 민주주의 수준에 가두고자 하는 흐름을 넘어서게 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했다. 또한 민중운동은 90년대 지배계급의 새로운 통치 전략인 보수대연합과 두 국민 전략을 통한 민주화운동의 분할지배 등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사회 각 부문에서 구축한 대중적 진지를 토대로 96~97년에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전국적 총파업투쟁과 대규모 정치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보수반동세력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특히 IMF 체제와 김대중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적어도 형식적으로 해체된 조건에서 민주화운동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민중운동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다. 이미 민주화운동진영의 상당수가 대거 지배블록에 투항했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되어 김대중 정부와 파תר너십을 갖고 민주개혁을 달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상은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언술적 수준에서의 정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실제 정책은 개혁개방의 미명 아래 IMF·WTO 등으로 표현되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쓸만한 기간산업을 모두 헐값에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며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사실상 한국 경제의 운명은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돌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건 인권이나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강행함으로써 IMF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새로운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사회복지와 공공성의 후퇴, 그리고 인권 평화 민주주의의 역행 등을 가져오고 있다. 민중운동은 IMF 체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는 경제적 재앙에 대항하여,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통치에 대항하여 선두에 서서 투쟁을 전개했다.

민중운동의 이 같은 역할은 김대중 정권 시대에 사회운동의 지형을 진보 대 보수로 급속하게 재편하는 계기가 됐으며, 체제 내적인 시민운동도 보수적 시민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으로 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민중운동진영과 진보적 시민운동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또한 민중운동이 주도하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이 강화되는 속에서 노동운동과 환경, 평화, 인권, 여성, 문화 등 소위 녹색운동진영과의 연대가 진전되고 있다. 이는 노동의 사회화와 녹색운동의 급진화, 진보화를 통해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전선에서 적·녹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진영 내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2년 3월에 개최된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2002>와 6월에 열린 <6월 항쟁 정신계승 반전평화대회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회적 의제는 오늘날 민주화운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이다. 민중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이 함께 모인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2002>에서 사회운동진영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패권적 군사주의에 맞서 공공성의 확대, 민주적 기본권의 신장과 사회 경제적 차원의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반전평화 군축,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등을 사회운동의 과제로 내걸고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화운동진영은 87년 6월 항쟁 15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진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성찰하면서, 6월 항쟁 계승의 현재적 의의는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로 무장한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 수탈 구조를 청산하는 방향에서 미국의 침략전쟁 반대, 미군기지 철수, 한반도 평화 실현, 민중의 민주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평등과 민족자주 쟁취,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한반도 평화구조 등에 있음을 동의하고 민주화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런 의미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민중운동은 내적 정체성이 해체되고 있는 그간의 민주화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또한 야만적 수탈과 폭력적 전쟁이 질주하는 보수반동의 시대에 민주화운동의 전망과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도록 진보 대 보수 간의 새로운 대치전선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로 표현되는 중도보수 정권의 자유주의 개혁의 좌초를 선고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 정권 아래에서 세계화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재앙 등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개혁 대 민주 구도로 민주주의 전망을 열어가고자 했던 사회운동 내의 자유주의적 민주화운동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2) 민중운동의 한계와 문제점

민중운동은 위와 같은 수많은 역할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해야 할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변혁운동의 전망을 지향하는 민중운동은 기층 대중운동의 전체적인 확산과 부문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진영과 지배권력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전쟁 정국에 대한 총체적 대응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기층 민중운동은 현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상설적 공동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반신자유주의, 반전·반미전선을 힘 있게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역시 민중운동진영에서 아직 충분한 대중적 동의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민중운동진영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진보적 시민운동과 녹색운동진영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치세력화를 구축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노·농 민중연대에 기초한 전선운동의 재구축과 범민주 진보진영의 힘 있는 정치세력화는 민중운동이 달성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 과제지만, 이는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충분한 의사소통, 연대의 경험과 신뢰의 축적 속에서 진전될 수 있는 사안이다.

둘째, 반신자유주의 반전·반미운동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둘러싸고 힘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적 토대도 여전히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경우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총파업투쟁과 정권 퇴진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선을 형성하고자 했으나, 총자본의 차별화된 구조조정 공세로 각개격파당하면서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를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운동 내부의 정파적 분열과 조합주의적 경향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계급운동을 강조하는 경향과 제국주의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경향 간의 대립, 변혁적이고 계급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세력과 사회적 조합주의를 추구하는 실리적 노동운동 간의 대립 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운동 내의 통일단결과 혁신이 지체되고 있으며, 갈수록 거세지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대응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 해결은 동전의 두 측면이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사물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분파주의의 반영이다.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계급적 관점에서 민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는 전략은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 시대에 제국주의 문제를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트레

이드 마크처럼 생각하고 이를 부차화하려는 좌익적 경향이나, 계급 모순이 격화되는 사회주의 변혁의 전야에 민족 문제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낮은 수준에 제한시키고자 하는 자주통일론적 시각 모두 80년대 수준의 낮은 정파적 인식이 보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민중운동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진보 대 보수 구도로 전선의 지형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민주적 과제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민중운동은 민주화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민주화의 후퇴, 구체제의 온존강화, 신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강화, 지역주의와 신반공주의의 대두, 민족통일의 문제 등 근대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운동 속에서 적극적으로 배치하지 못함으로써 민중운동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진영을 결집시키는데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중운동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지난 15년 동안 제한적이거나 자유화, 민주화로 인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환경, 정보, 여성, 문화, 생태, 평화 등 새로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전략적 개입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쟁점은 모두 계급 환원론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즉, 자본의 지배 영역은 생산관계가 지배하는 직접적인 자본임노동관계만이 아니라 소비생활 영역은 물론이고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새로운 문제와 쟁점들은 민주주의가 지체되거나 역행하는 국면에서 진보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수의 내용을 강화하는 형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민중운동의 적극적인 개입과 연대의 전략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특히 환경, 생태, 여성, 평화, 문화 등 신사회운동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이해와 개입 전략은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진보운동의 내용을 좀더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배진영이 추구하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할지배라는 이중 전략을 결정적으로 와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현 단계 민중운동의 쟁점

민중운동의 발전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논쟁은 일정한 대중적 영향력을 갖고 실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민중운동 내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MF 체제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내부 투쟁이 전개됐다. 하나의 입장은 IMF식 개혁을 활용하여 지난 30년간 누적되어 온 국가관료독점체제를 개혁하여 경제 위기 극복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가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관점에서, IMF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보다 재벌개혁과 정치민주화를 통해 수구보수세력을 약화시키고 민중운동진영의 개입력을 확대해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투쟁의 전선을 수구 대 개혁의 구도로 설정했다. 이런 입장을 지지한 사람들은 대체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가나 전농의 농업개혁위원회 등의 참가를 주장했으며, 김대중 정권의 개혁을 엄호하고 강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전술적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또 다른 입장은 IMF 지배 체제는 위기에 처한 초국적 금융자본이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 재편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봤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한편으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매개로 과대성장한 국가관료자본주의를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인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로 재편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이에 반발하는 민중운동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데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쟁점은 민주노총 내의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둘러싼 논쟁, 98~99년 IMF 국본 논쟁, 99년 전농의 농업개혁위원회 참가 여부 논쟁, 2001년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을 둘러싼 논쟁 등을 거치면서, 실천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와 김대중 정권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선을 형성하면서 논쟁의 큰 가닥이 정리되고 있다.

둘째,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간에 소통과 연대를 둘러싼 논쟁이다. 여기서 시민운동이란 구체적으로 시민사회운동 일반을 지칭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운동연합(1993년 창립), 참여연대(1994년), 함께하는 시민행동(2001년) 등과 같이 과거 80년대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함께 해 오다가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사회운동 영역으로 분화되어나간 사회운동단체들을 말한다. 민주화운동진영으로 함께 묶여 있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김대중 정권의 개혁과 사회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된 결과, 2000년을 전후하여 전국민중연대 흐름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흐름으로 나누어지면서 협력보다는 경쟁적 대립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민중운동진영은 98~99년 사이에 내부의 실천적 논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김대중 정부와 대립전선을 명확히 형성시켜 나아갔다면, 시민운동은

개혁과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을 추구하면서 수구 대 개혁의 구도에서 개혁의 담론을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자 했다. 즉, 시민운동은 민중운동진영의 주요한 의제인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반대, 노사정위 해체, 농업구조조정 반대,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IMF 반대 등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아예 외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소홀히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운동진영도 2000년 4·13 총선 이후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야기하는 폐해가 심각해지자 민중운동과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해 왔다. 이는 김대중 정부 개혁의 작초와 더불어 더 이상 김대중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시민운동진영의 판단 등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 같은 시민운동의 변화와 관련하여 민중운동진영 내에는 시민운동과의 교류와 연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흐름과 이를 반대하는 흐름으로 논점이 형성되기도 했다. 전자의 입장은 민중운동진영이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구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 개혁의 정체 또는 후퇴 그리고 중요하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파괴적 결과로 인한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형해화 등으로 시민운동진영이 정부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급진화되어 가는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진작시키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적극적으로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입장은 시민단체들이 김대중 정권의 개혁 2중대로 전락한 속에서 그들의 본질을 폭로하고 타격하는 전술이 중요하고, 지금은 계급적 민중운동전선의 결집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쟁은 2002년 3월 23~25일까지 개최된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2002>을 거치면서 큰 틀에서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미 실천적으로는 2001년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으로 노골화된 노동탄압 정국에 대항하여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진영이 망라된 288개 사회단체의 공동 대응이 있었으며, 이어 2001년 9·11 테러 이후 벌어진 부시 정권의 전쟁 정책에 반대하여 김대중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700여 단체들이 <반전쟁화공동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등을 내걸고 공동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전체 민주화운동진영의 핵심 의제로 반세계화를 통한 계급적 평등의 과제와 반전·반미를 통한 반제·자주의 문제가 전면부에 부각됐다고 할 수

있다. 민중운동진영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2002년 2월 발전산업노조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공공성 담론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반전·반미투쟁은 2002년 2월 부시 방한 반대투쟁과 주한미군 여중생 살해 규탄투쟁을 거치면서 전체 민주화운동진영의 공동 과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런 투쟁 속에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연대를 강화시키는 매개로서 지식인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2001년 학단협과 민교협 또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던 지식인 활동가들이 교수노조로 결집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진영의 연대와 교류를 추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IMF 반대 반세계화운동의 진전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반제운동의 방향과 관련된 문제이다. 민중운동진영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식민지 모순을 강조하는 NL진영(민족민주운동)과 국내의 노자간 모순을 강조하는 PD진영(민중운동 또는 좌파운동)으로 나뉘어 분화와 통합을 반복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IMF 지배 체제를 겪으면서 특히 제국주의 지배와 종속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국적인 제국주의·식민지 지배에 따른 민족해방운동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 연관하여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운동의 양 진영은 IMF 초기에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하는 모순을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적 의제를 정파적 의제로 제한시키는 한계를 보였다. 소위 좌파진영은 일국적 관점에서 반신자유주의 반독점투쟁에 집중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자기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IMF-제국주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 사회의 모순구조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에 소위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제국주의의 지배 수탈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쟁점화시켰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제를 전통적인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총 노선에 가둠으로써 날로 격화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적 모순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 민중운동의 흐름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반세계화운동과 반전운동의 영향 속에 상호침투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지배수탈구조를 부차화시키며 반독점투쟁을 중시하던 좌파진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초국적 자본의 집행기구인 WTO, IMF, 각종 투자협정 등에 대한 국내외적 반대투쟁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제국주의 문제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IMF 체제에서 날로 강화되는 미국의 한반도 정치군사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구조에 대한 반미투쟁을 계급 대 민족의 문제로 이원화하는 강한 경향을 지속시킴으로써, 사실상 민족 문제에 대한 계급적 접근을 스스로 봉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신좌파진영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반세계화반전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연결시킬 것을 주장하는 반제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주민주통일의 기치 아래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면서 민족민주전선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인 민족해방의 관점에서 현대 제국주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계급모순의 격화와 이에서 분출되는 반자본주의적인 민중들의 요구를 자신의 총노선 속에 실천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즉, 민족자주와 연방통일조국 실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등, 남한 사회에서 형성되는 정권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대해 여전히 깊은 고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지점이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둘러싸고 민족민주운동진영이 동요해왔던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족운동진영의 양대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민족민주운동과 좌파운동은 여전히 사회 성격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을 둘러싸고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만, 반제 문제에 대한 실천적 인식은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세계적인 자본운동의 측면에서 전개되는 반세계화운동과 적극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좌파운동에게는 반미운동과 반전운동에 대한 실천적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넷째, 정치세력화 문제와 관련한 쟁점이다. 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민주화운동진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제도권 야당이 초국적 자본의 지원을 받아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 즉 김대중 정권의 등장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적어도 김대중 정부의 등장으로 형식적이지만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해체가 완료됐음을 의미하며, 민주진보진영 역시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한 독자적인 정치적 자립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민주운동진영의 정치세력화 논쟁은 상이한 문제의식 속에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 하나는 민주진보진영의 계급연합 정당인 민주노동당 등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 강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비제도권 정당을 의미하는 노동자 정치조직론이고, 마지막 하나는 사회주의 계급정당론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들 모두는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사실상 비합법 전위정당 노선을 폐기하고 합법적(반합법적) 정치 활동으로 이동하는 전략적인 노선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대립과 분열의 주요 지점은 조직노선상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노선상의 차이와 분열이다. 이 같은 정치적 입장에 따른 조직상의 분열과 분파적 대립은 한편으로 대중운동 영역에서 계급적 정치세력 형성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대중운동 내부의 파당경쟁과 노동자 내부의 분열을 가속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민중운동의 통합적인 정치적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노선상의 차이는 97~98년 시기 때와는 달리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전체 민중운동의 연대에 기반한 정치세력화 시도는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범민주진보진영을 폭넓게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1997년 대선처럼 다시 극심한 분열의 길을 반복할 것인지가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통일운동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반신자유주의·반미투쟁을 전개하면서 정세를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사안에 따라 김대중 정권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신자유주의 관점에서 6·15 공동선언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입장이 나타났다. 이런 입장의 차이는 기왕의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과 연동되면서 민중운동 내부에 심각한 갈등과 균열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 4. 민중운동의 전망과 과제

오늘날 민중운동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 사회운동은 현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적 패권주의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의 전방위적인 공세 앞에 놓여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몰락해가고 있는 자본주의지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물귀신처럼 반세계화 반자본운동세력의 발목을 잡고 함께 죽자고 덤비고 있다. 그 결과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는 물론이고, 일국 내의 계급계층간에도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등, 세계 경제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 또한 초국적 금융자본과 제국주의 세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반세계화세력의 초토화를 위해 군비확장과 지구적 차원의 전쟁 정국을 형성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폭력과 전쟁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첫째, 민중운동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 지배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반세계화, 반전·반미투쟁을 결합함으로써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자신의 대안적 전망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정치투쟁의 방향과 관련해서 신자유주의와 대테러전쟁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미국, 이에 종속된 국내 정권에 대한 투쟁이라는 반제·반정부투쟁의 방향에서 통일되고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중운동은 전국민중연대를 전선적 발전 전망을 갖는 상설공동투쟁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민중운동진영은 기층 대중운동 중심으로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보적인 여러 정치조직들이 함께 결합하는 상설공동투쟁체 조직을 건설해 왔다. 상층에서의 통일전선조직이 무너진 현재의 조건에서는,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하층 통일전선운동을 강화하면서 강력적 통일을 대중적으로 담보해내고 좀더 높은 차원으로 전선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국민중연대는 산하에 <WTO반대 식량주권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농 연대에 기초한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강화해 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전평화민족자주위원회>라는 공동투쟁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미반전운동진영과 반세계화운동진영 간의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모아 민중운동진영은 진보 대 보수의 구도가 뚜렷해지는 2002년 대선 이후 민중운동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결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사안별, 부문별 연대투쟁에서 오는 정치적,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좀더 위력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항전선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중운동 또한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중운동진영의 단결과 연대를 통한 전진과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 정치적으로 다양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운동을 보수정당에 맞서는 전략적 대통합의 흐름으로 묶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치세력화 역시 전선운동 및 새로운 사회운동과의 밀접한 결합 속에서 추진되지 않는 한, 일정하게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전체 운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중운동과 결합한 정치적 운동진영은 한편으로는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 건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힘 있는 정치적 대안세력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실질적인 노동자, 농민, 서민, 중산

층의 정당으로 그리고 민중에게 희망과 전망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전략적인 논의와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민중운동진영은 진보적 시민운동, 특히 녹색운동진영과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 그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경제 문제는 생태, 여성, 평화 등 녹색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민중의 권리 축소는 물론, 자원과 환경에 대한 파괴, 그리고 자유무역과 전쟁으로 인한 빈곤의 구조화 등을 고려할 때, 민중운동진영과 녹색운동진영 간의 사회정치적 공동전선 형성은 반세계화 운동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